

충청남도 갈등관리 강화방안 -도, 시·군 협력강화



2018. 3. 28.

고승희

충청남도 갈등관리 강화방안

목 차



I.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현황



II. 도, 시·군
협력의
필요성



III. 도-시·군의
협력방안



IV. 향후과제



V. 기대효과



충청남도 갈등관리 강화 방안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현황

1.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현황

갈등관리 정책

ㄱ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 충청남도는 2014년 12월 30일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조례 제 3943호)를 전면개정·공표 하였으며, 현재 도내 15개 시·군이 조례제정을 완료함
-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제도의 골격은 갖추었으나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

ㄱ 공공갈등의 선제적 대응

- 공공갈등의 기술검토,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갈등조정협의회 지원, 갈등현안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기존 갈등현황의 점검과 모니터링 수준에서 벗어나, 갈등 전·후 사안별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대응 계획 수립을 지원함



1.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현황

갈등관리 정책

ㄱ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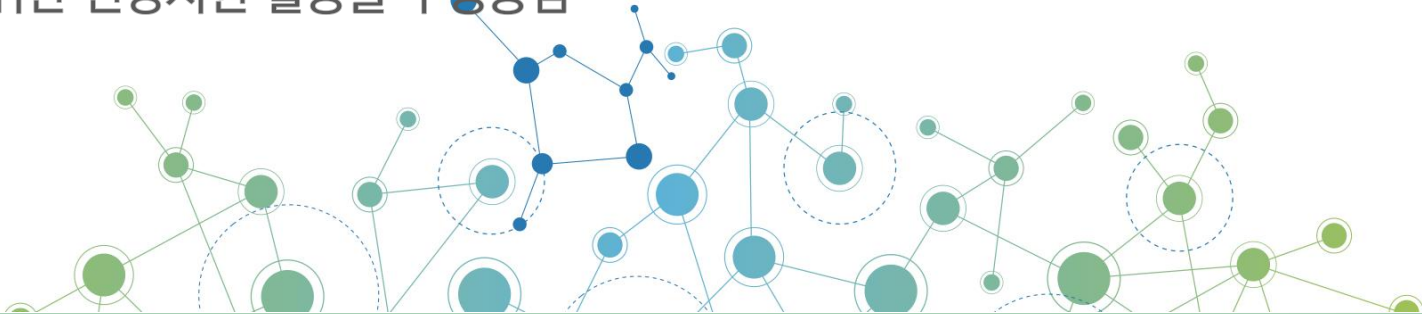
- 충청남도에서는 2013년부터 갈등관련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道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음
- 현재 道갈등조정협의회는 2개(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예당지 용수이용체계 갈등)가 운영중임

ㄱ 공공갈등 현안 정책연구

- 道.시.군의 주요 사업중에는 갈등유발요인의 정책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갈등유발요인들의 적실성 및 정확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ㄱ 갈등관리 현장 지원

- 공공갈등 발생시 갈등사안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관리체계 수립 등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지원 활동을 수행중임



1.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현황

갈등관리 인프라 구축



갈등전문기관 운영



민·관협력체계 강화



갈등관리 교육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충청남도 갈등관리 강화 방안

도, 시·군 협력의 필요성

2. 도, 시·군 협력의 필요성

공공갈등의 지속적 분출

- ㄱ 최근 사회구조가 분화되고 이해관계가 다원화 되면서 각 분야에서 공공갈등이 끊임 없이 분출됨
- ㄱ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립 등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행정적·사법적 해결방식으로는 갈등해결의 한계에 이르고 있음

갈등발생 증가에 따라 체계적 대응 요구

- ㄱ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른 시민 참여·권리의식 향상으로 각종 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발생 증가 추세임
- ㄱ 공공갈등은 지역간의 비선호시설의 입지, 철도역사 등 선호시설 건립을 둘러싼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으로 지역간의 분열을 초래 할 우려가 크므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됨

2. 도, 시·군 협력의 필요성

갈등관리 방식의 변화 필요

- ㄱ 능률편향적인 정책과정을 시정하고 주민의 요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즉 갈등주체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갈등관리방식의 변화 필요함
- ㄴ 사후적 갈등해결 → 사전적 갈등예방, 정책추진 결과의 중요성 → 정책추진 과정의 중요성, 행정 및 정책 효율성 → 행정 및 정책의 민주성과 형평성, 사법적 판결 → 당사자 간 협상으로 갈등관리 방식의 변화 필요

제도적 시스템 필요

- ㄱ 복합화된 갈등의 원인은 갈등의 주체인 정부와 주민간의 불신에서 비롯됨
- ㄴ 효과적인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갈등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달성이 필요함
- ㄴ 정책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절차적 정당성 보장을 토대로 공공의사결정과정에서 초래 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관리·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필요

2. 도, 시·군 협력의 필요성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필요

- ㉮ 공공갈등으로 인한 각종 소송 등으로 과도한 비용 지출은 물론 행정 신뢰성 결여로 지역주민 불신 초래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가 요구됨
- ㉮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독자적인 갈등 해소 역량이 미흡하여 갈등 해결에 한계가 있어 갈등전문 인력 지원이 절실함

갈등 사안이 광역화로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 갈등의 양상이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일정지역을 초월하여 광역화 현상으로 표출됨
- ㉮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역간의 경쟁구도는 물론 지역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갈등 증가로 지역간의 분열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및 컨트롤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



충청남도 갈등관리 강화 방안

도, 시·군의 협력방안

도의 역할과 기능

㉞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 주요 갈등현안 선정 및 갈등현황 관리
- 갈등진단 및 영향분석을 통한 갈등 대응 지원
- 갈등현안 정보 및 갈등 해결 사례 매뉴얼 작성등 정책결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정책결정 이후까지 정책추진의 전 단계에 걸친 상시적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적용
-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하여 전략적 대응 추진

㉞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통한 갈등관리

- 충청남도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의를 통해 합의형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 도입
-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주민들의 참여 유도하여 갈등관리에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갈등관리 구현
- 합의회운영,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규제협상, 시나리오워크숍 등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적용 검토

㉞ 갈등관리 인프라 구축

- 각 시·군별 공공갈등현안 정보공유 및 기초자료 작성, 사례 공유 필요
- 각 시·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등 지역여건에 맞는 갈등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
- 갈등의 양상이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일정지역을 초월하여 광역화 현상으로 표출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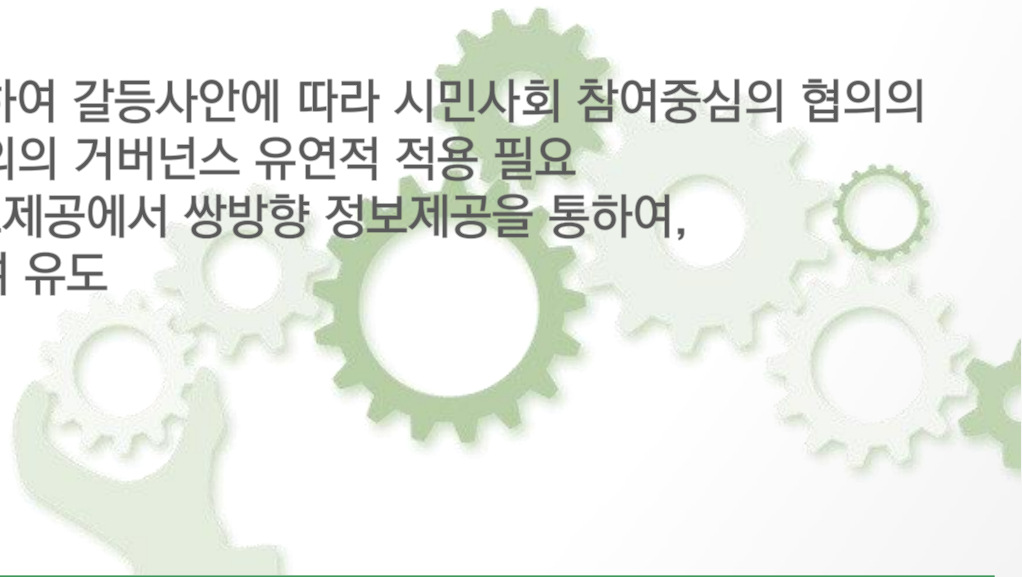
시·군의 역할과 기능

㉠ 시·군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 각 시·군별 공공갈등현안 정보공유 및 기초자료 작성, 사례 공유 필요
- 각 시·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등 지역여건에 맞는 갈등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
- 정책결정자인 시·군은 갈등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로써 갈등전담팀 도입, 갈등관련 예산운영, 갈등영향분석 활용 등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운영

㉡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예방 및 관리

- 새로운 협력 형태인 거버넌스를 통하여 갈등사안에 따라 시민사회 참여중심의 협의의 거버넌스와 기업 등도 포함하는 광의의 거버넌스 유연적 적용 필요
-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일방적 정보제공에서 쌍방향 정보제공을 통하여, 지역주민·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충청남도 갈등관리 강화 방안

향후 과제

4. 향후 과제

ㄱ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도·시·군의 공감대 형성

- 도·시·군 상호간에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갈등사안별 맞춤형 지원 및 협력
- 갈등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ㄴ 전문인력 확보 및 주민참여 방안 제고

- 공공정책 갈등의 과정에서 갈등관리 전문가, 지역주민이 갈등의 중재 및 협의의 주체로 참여할 경우 공공적 측면의 합리적 대안점과 합의점 형성에 도움이 됨
- 정책소통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공공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이론적·기술적 역량을 갖춘 갈등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함

ㄷ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마련

- 갈등관리 기구 및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도, 시·군 자치법규 제·개정
- 전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 교육·훈련방안 마련
- 재원부담을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충청남도 갈등관리 강화 방안

기대효과

5. 기대효과

도와 시군의 체계적인 공공갈등의 대응을 통한 사전예방

도와 시군의 협업을 통해 공공갈등 해결역량 강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예방을 통한 주민의 행정신뢰도 향상

갈등 조기 해결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손실 최소화

주민 참여를 통한 갈등관리로 도민 체감형 참여자치 확산





감사합니다